

제3차 장관-정책고객과의 대화 결과

1. 개 요

- 일 시 : 2004. 12. 2(목) 12:00 ~ 13:30
- 장 소 : 타워호텔 그랜드볼룸
- 참석자 : 67명
 - 외 부 : 민족통일협의회 의장단 등 임원 60명
 - 통일부 : 장관, 통일정책실장 등 7명
- 행사 내용
 - 대북정책 추진 현황 보고
 - 정책제안 청취 및 질의·응답

2. 장관冒頭 인사

- 참여정부는 어려움 속에서도 2년 동안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으며,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이정표를 세웠음.
- 내년은 광복 60주년, 6·15 5주년 등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해임. 한반도는 6·15를 기점으로 구냉전에서 탈피, 세계흐름에 합류하게 되었음. 하루빨리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 남북경제공동체가 건설되도록 노력할 것임.

3. 주요 건의 및 장관 답변 요지

【북핵 문제 관련】

-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,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해 평화 의지를 천명한 노 대통령의 LA 연설과 한미 정상회담은 통일부 장관이 이끄는 외교·안보팀의 공적
- 이제부터는 통일부가 북핵 문제 등 남북관계를 세계 속에서 구체적, 주도적,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야함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“평화” 구축이며, 진보·보수를 아우르는 7천만 겨레의 “평화천명운동(가칭)”을 추진해 주길 바람.
- 향후 6자회담 등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정부의 최후 시나리오가 있는지 궁금함.

【장관 답변】

- 현재 북핵 문제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된 것은 대통령의 LA 연설 및 한미 정상회담이었음.
 -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한미동맹에 문제를 일으키는 발언이라는 비평도 있었으나 이는 “깊은 고뇌와 고민의 소산으로 준비된 말씀”이었음.
 - “대화는 하되 협상은 하지 않는다”는 미국에게 이제는 “협상”을 해야 할 때라는 Key Word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음.

- 한미 정상이 “북핵문제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”한다는데 합의한데 이어, 한·중 정상회담에서도 “북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”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반도를 평화의 물길로 인도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함.
-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외의 다른 좋은 방안은 없으며, 북한을 포함한 관련국 모두가 6자회담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음.
 - 남한의 핵물질 실험과 내용, IAEA 시찰 및 이사회 종결 등에 대한 북한의 의혹에 대해, 6자회담의 공식 의제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용의가 있음.

【남북정상회담 관련】

-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여부 설명 요청

【장관 답변】

- 분단 50년사에서 현재 남북한 공히 기본 정신으로 삼고 있는 것이 6·15 공동선언임.
 - 2차 정상회담은 6·15 공동선언의 ‘서울답방’ 약속 이행차원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할 문제이며 남북관계를 한 차원 up-grade 하기 위해서도 필요, 그러나 환경조성과 준비가 필요함.
 - 김정일 위원장은 북핵 해결을 위한 전략적 결단과 함께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위한 정상회담을 결단할 필요가 있음.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2005년 중에는 성사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함.

- 특히, 개성공단건설사업 등 대단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도 정상회담이 필요함. 정부는 핵 문제 해결과 남북교류의 병행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북핵문제 해결 지연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
- 전략물자 반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15개 입주기업 중 13개 기업이 협력사업 승인이 되었으며, 최근 한·싱가폴 FTA 타결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되어 원산지 문제도 잘 해결될 전망
- 개성공단사업은 '서울의 금융'·'인천의 물류'·'개성의 제조'를 연결하는 동북아의 "삼각허브"로 가기 위한 기초사업임.
- 또한 북한이 경제난을 해결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출구이자, 남한의 중소기업에도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것임.

[민간 통일단체 지원 및 활용 관련]

- '민통'은 민간통일단체 중 가장 모범적이며 전통 있는 조직으로 차량, 페인트 지원 등 활발한 대북지원 활동도 하고 있음. 민간의 통일운동을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람.
- 특히, 민통회원에게도 중·고생 및 교사 대상의 금강산 체험 학습 지원과 같은 방북 지원을 요청
- 최근 통일·대북 정책이 안정돼 가고 있으나 對국민 홍보가 다소 부족함. 지자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민통 조직을 정책설명 및 홍보활동에 활용하기 바람.

【장관 답변】

- 금강산 관광 지원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임. 민통간부들의 금강산 방문 지원 문제는 검토하도록 하겠음.

【기 타】

-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견들을 잘 결집시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
- 대북 식량지원 시 수입쌀 지원, 북한이탈주민 정착 관련 종합 대책수립 및 백두산 관광 사업 추진 등 건의

【장관 답변】

- 의무적으로 수입한 쌀은 이전이 금지되어 있어 대북지원을 할 수 없음.
-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6천명(올해만 2천명)을 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"탈북자 간첩활동" 관련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름.
- 백두산 관광사업은 현재 민간에서 스키장, 골프장을 포함하는 대규모 리조트 건설 사업으로 북측과 협의 중에 있음. //끝//